

제13회 자연보호세미나

자연보호중앙협의회주최 6.26-28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식고취 및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3회 자연보호세미나」가 지난 6월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인천직할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내무부의 후원으로 자연보호중앙협의회와 인천직할시가 주관한 이번 자연보호세미나에서는 무분별 훼손되고 있는 자연훼손에 대한 사전방지제도장치로서의 자연휴식년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및 연합자연보호회 활성화방안 등 제반 자연보호대책들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속에서 논의되었다.

주제발표 및 연구과제 내용 요약

기조연설 : 지역개발에 따른 자연보호 운동의 전개방향

노동희(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제 우리는 지자체실시와 더불어 제2의 지역개발기에 들어서 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주민주도하의 지역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며 이것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떠한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생활환경의 오염이 예측되며 지역개발이 주택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이어져 남개발의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색 주민운동이 필요하다. 개발정책과정에 참여,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자연보호와 생활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를 통해 녹색정치를 구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은 지역개발의 추진에 있어 지역 수용능력을 토대로 한 환경계획에 입각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1 주제 : 자연보호 활동의 성과와 그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이인규(서울대 교수)

1963년에 시작된 자연보호활동은 '77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발전해오고 있다. 그동안 자연보호는 정화활동을 통하여 자연훼손의 실상을 깨닫게 하며 자원재활용, 소비절약의식을 고취시켰고 자연공원 등 보호대상의 지정관리, 자연탐구시설 운영,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자원 및 환경보존의 세분야로 나뉘어져 실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없이 자연보호는 여전히 같은 노력만 되풀이할 것임에 틀림없다. 자연보호를 위한 의식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자연보호기본법의 제정, 자연보호 관련부서의 독립 내지 상향조정이 요청되며 순응과 조화라는 한국적인 자연관을 현대과학적 지식으로 여과해서 올바른 윤리관을 재정립하여 자연은 공유재산이며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다는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과 연구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제2 주제 : 자연휴식년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이경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산업발전과 함께 폭증하는 이용객에 의한 이용압력과 관리능력이 부족한 공원당국에 의해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확대되고 있다. 차제에 금년 1월1일부터 14개 국립공원의 일부 등산로에 대해 3년동안 자연휴식년제를 도입 실시함은 시기적절한 일로 생각된다.

올바른 자연휴식년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 1인당 천원씩 지원하는 액수인 400억원 정도는

국립공원관리에 정부가 지출해야 한다. 또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을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연휴식년제 시행검토 및 효과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 국립공원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비지터센터를 대폭 정비하여 이용객에 대한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 등산중심의 이용형태를 줄여 자연생태계의 파괴속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자연생태계의 변화현상을 파악,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직인 직원과 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제 3 주제 : 토양보존과 보호상의 문제점과 대책

최영길(한양대 교수)

토양생태계의 발달은 지상부의 식물생태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토양 1cm의 형성에 백년 이상이 소요된다. 토양생태계의 생물학적 작용은 표층에서 가장 활발하며 대략 1m 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호연계된 작용을 수행할 만큼의 다양한 생물군이 존재해야 한다. 토양보존은 이러한 토양생물의 존속, 번영,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인위적 조치이다. 그러나 토양생태계는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중의 기능생물군을 치사시키고 토양의 산성도를 높여 기능을 마비시키며 늘어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의 매립은 토양호흡의 기능장애 요인이 된다. 또한 산성비도 토양에서의 곰팡이류만의 번성을 초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여 식물이 뿌리가 썩고 흙을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살포의 적절한 시기선택, 천적의 이용, 유기농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폐기물의 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리수거,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인력 등의 투자가 요구된다. 동력에너지 사용의 불가피성으로 야기되는 산성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시 연소온도를 1500℃로 낮추는 등 NO₂나 SO₂의 발생량을 최소화해야 하며 토지의 변형시 표층토 유실을 감안한 계획이 삽입되어야 한다.

제 4 주제 : 물의 중요성과 보호실태 및 대책

홍사욱(성균관대 위생학과 교수)

우리가 이용하는 총 수자원량은 연간 276억톤으로

강수, 하천수, 지하수 등 주로 하천형 수질로써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 상수 및 공장용수등 수자원의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생활하수, 쓰레기의 증가, 공장폐수, 농업폐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어서 수계 생태계변화, 연안 어업의 피해 등으로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각종 폐수가 직접 방류될 때의 오염부하량 등을 조사하고 공공용수는 이용 목적에 알맞은 수질환경 기준치 설정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상수원구역 이용과 개발을 억제해야 하며 공공용수에 유입되는 하천은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일반 수질기준 항목 이외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규제항목 등의 한계를 철저히 준수케 해야 한다.

국민은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고조,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감시기구를 철저히 가동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도별 연구과제1 : 연합자연보호회 활성화를 통한 자연보호 강화방안

박철현(광주직할시 국민운동지원과장)

산업발전, 경제팽창 속에서 심각한 자연훼손과 오염이 자행되고 있다. 더불어 자기의 이익과 이론을 표출하는 사회단체와 자연보호단체, 환경감시단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상황에 대처키 위해 유관단체들을 연합, 새로운 활동체계인 연합자연보호회를 자생적으로 결성해, 이들이 자연보호운동을 주도케 하고자 한다. 이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목표의 설정과 활동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국가정책과 지역주민의 이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내 상징물이나 명승지를 자연보호와 연계시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무등산을 건강하게 존립시키기 위해 「무등산 알기 운동」 「무등산 사랑하기

운동」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7개 연맹체, 10만 회원을 확보, 각계 권위자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조직의 운용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자연보호회의 활성화는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 각 가맹단체의 특수성·자율성 인정, 상징물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능, 감시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시·도별 연구과제2 : 산림내 취사금지의 효율적 운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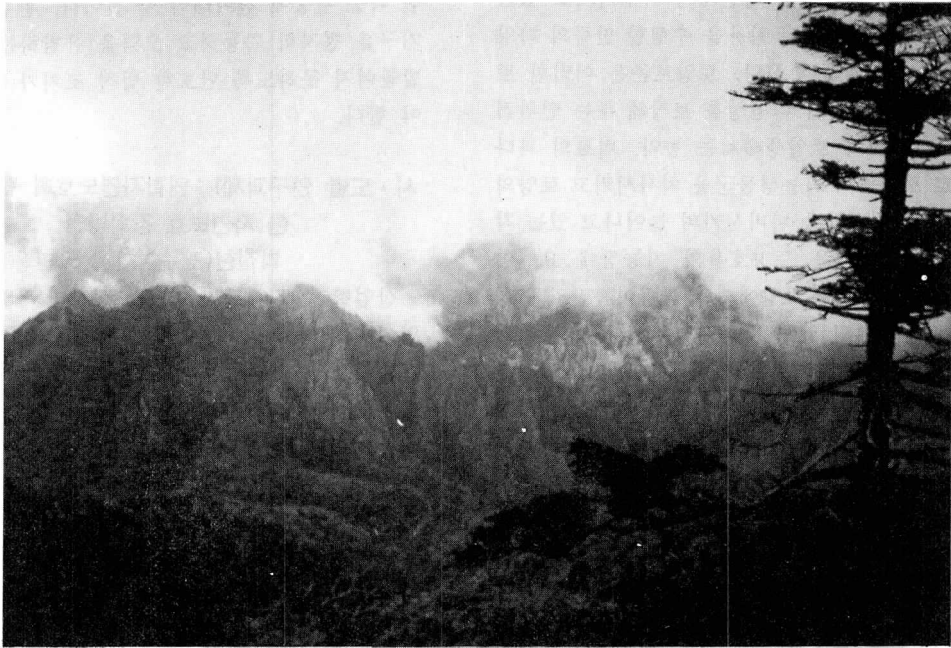
김두운(제주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자연공원 등 대부분의 산이 그러하듯 한라산 국립공원도 유원지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한 방안으로 산에서의 취사금지 시책을 추진, 국민적 공감 속에 시행되고 있다.

취사금지 시책의 추진을 위해 산에서의 산악행사

도 축소하는 한편 한라산보호연합회를 조직, 산에서의 취사금지 계도와 자연정화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홍보는 도내 64개소의 여행사와 관광객 운수업체 12개소를 통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346명의 단속반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준법의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이지 않는 곳,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취사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강이나 하천, 해안변에서의 취사행위가 증가되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취사금지의 효율적 운용방안으로 등산로 입구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춘 곳에 야영, 취사를 할수 있는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객수의 제한, 관리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악회 등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본 공룡능선(촬영 吳判龍 사무국장)